

中國統一問題의 政治的 意義*

—‘一國兩制’와 ‘一國兩區’의 背景 및 概念 分析—

吳 東 野

- | | |
|------------------------------------|-------------------|
| I. 머리말 | IV. 海峽兩岸의 相互關係發展과 |
| II. 西歐 統合과 中國統一 | 그 困境 |
| 모델의 相異한 理論構造 | V. 맺 음 말 |
| III. ‘一國兩制’와 ‘一國兩區’의 形成背景 및 概念의 分析 | |

I.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終戰後 곧이은 美蘇兩強大國의 冷戰體制 突入은 아시아 地域의 情勢에 不安定을 야기시켰으며, 國際적으로 네 개의 分斷國家(中國·獨逸·韓國·越南)를 出現시켰다. 비록 그 分斷의 原因과 背景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分斷後 各 雙方政權의 政治·經濟와 社會制度는 현격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¹⁾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라 越南은 1975년 봄 越盟의 軍事力에 의해 併合되었고,²⁾ 獨逸의 統一問題는 東유럽의 政治·經濟改革 潮流의 폭발 이래 채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兩獨間 ‘統一條約’(Ver-

* 이 論文은 第11次 韓中學術會議에서 主題發表된 것임.

- 1) 1970년대에 分斷된 南北 예멘(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 & Arabian Republic of Yemen)은 그 狀況이 비교적 특수하므로 本文의 範圍에서 제외함.
- 2) 越南이 정식으로 통일된 날짜는 1976년 7월 2일이 된다. *Asia Yearbook*, 1982, P. 25; John C. Donnel, "South Vietnam in 1975: The Year of Communist Victory", and Carlyle A. Thayer, "North Vietnam in 1975: National Liberation, Reunifica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Asian Survey*, Vol. XVI, No.1 (Jan. 1976), PP.1-22.

einigungsvertrag ; Treaty of Unification)과 戰後 四強간의 '2+4' 회담을 통하여 원만한 解決을 보았다.³⁾ 남북한 政府도 1990년 9월 5일 史上初유의 總理級 高位會談을 진행하면서,⁴⁾ 政治妥協의 第一步를 내딛었다. 그러나 오직 中國(이하 海峽兩岸이라 稱함)만이 분열된 兩政權間에 公開의 政府間 接觸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海峽兩岸의 中國人들에게는 分斷國家의 政治의 統一의 前段階인 相互交流施策의 探索이 獨逸에서의 成功的 先例後 朝野間 共同的 課題가 되었다. 2차대전 후 中國의 분열은 이미 40년을 넘어섰으며, 그간 海峽兩岸의 各 政權은 對外的으로 서로가 中國을 代表하는 唯一한 合法政府라고 주장해 왔다. 비록 雙方이 모두 '하나의 中國' 原則을 固守하고 있고, 台灣이 中國領土의 일부라는 입장도 변함이 없지만, 雙方間 軍事的 敵對狀況은 점차 緩和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78년 12월 15일 美·中中間 外交關係의 수립 이래 海峽兩岸 執權者의 '高姿態政治'(High Politics)⁵⁾는 適當한 調節을 거쳐 '解放台灣'(to relieve Taiwan) 또는 '救濟大陸同胞'(to save our mainland people) 등 主觀的 이데올로기에 類似한 宣戰用語를 적게 出現시키고 있다. '高姿態政治'와 '低姿態政治'(Low Politics)⁶⁾를 並行함으로써 雙方間에 武力衝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福建과 金門·馬祖間 相互砲擊도 상당히 減少하고 있다. 中共은 이를 위해 '三通四流'⁷⁾와 '一國兩制' 등 中國統一問題 해결의 모델을 만들어냈으며, 台灣도 '三民主義統一中國'(三民主義로 中國을 統

3) *Die Welt*, August 31, 1990, P.5ff ; Gunter Hofmann, "Deutsch-deutsche Verhandlungen", in *Die Zeit*, No.35(August 24, 1990), P.7.

4) 『中國時報』, 1990년 9월 4일 第1版 및 第5版 ; 9월 5일 第1版 및 第5版.

5) '高姿態政治'는 傳統的 現實主義學派가 強調하는 國家의 軍事安全, 戰略과 權力 또는 權力의 平衡問題를 가리킨다.

Robert O. Keohane &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Boston: Little, Brown & Co., 1977), P.24.

6) Ibid., '低姿態政治'는 相互依存論 學派가 강조하는 것으로, 經濟發展, 社會福祉, 環境保護 또는 人權問題 등을 重視할 것을 주장한다.

7) '三通'은 通航·通商·通郵(書信往來)를 가리키며, '四流'는 學術, 文化, 體育 및 科學技術의 交流를 가리킨다. 『人民日報』, 1978년 12월 17일 第1版 및 12월 23일 第1版 참조.

一하자), ‘中共放棄四個堅持’(中共은 4項堅持를 포기하라), ‘三不政策’,⁸⁾ ‘一國良制’, ‘一國兩府’와 최근의 ‘一國兩區’에 이르기까지 段階的으로 對應해왔다. 다시 말해서 最近 2年間 雙方的 民間交流活動이 날로 빈번해지고 있고, 台灣 內部에서는 台灣獨立을 主張하는 團體까지도 고개를 들고 있으나, 海峽兩岸 政權이 어떠한 形態로 現在의 相互關係에 對應할 것인가, 나아가 어떻게 中國의 政治的 統一을 위해 邁進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理念과 主張이 다른 것이다.

海峽兩岸의 最近 몇년간의 發展趨勢를 살펴보면, 雙方交流의 軌跡에서 台灣은 形式上 直接的인 通商·通航·通郵(書信往來)와 大陸住民의 台灣 入國과 居留를 不許하고 있으나, 民間團體와 個人的 接觸과 實際的 交流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海峽兩岸 政權은 雙方的 交流行爲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各說各話’(各自主張, agree to disagree)의 段階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近來에 台灣에서는 政治民主化·經濟國際化·社會多元化的 發展趨勢에 따라 中國統一問題에 대한 各種 意見이 紛紛한 狀態이다. 이에 執政黨인 國民黨은 不斷한 對中共政策의 調整을 통하여 現段階 海峽兩岸 住民의 利益에 併合하고 漸進的 交流를 통하여 自由民主的인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길로 邁進하려 하고 있다. 台灣住民의 自決을 주장하거나 台灣獨立의 論調를 公開으로 나타내는 團體나 個人에 대하여 보면, 台灣獨立論調의 言論과 實際行動間의 區分이 어려워짐으로 해서 ‘統一派’와 ‘獨立派’間의 對立이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內部的 理念紛爭을 어떻게 解決할 것인가 하는 점이 政策決定者들에게 계속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되고 있다. 中共政權의 專制統治下에서 大陸의 民間次元의 中國統一問題에 대한 視角은 거의 政府의 立場과 다를 바가 없다. ‘一國制’의 틀내에서 台灣에 대해 ‘三不政策’의 포기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가능한 빠른 時日內에 ‘祖國統一의 大業을 完成하자’는 것 이외에 어떠한 다른 主張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

8) 소위 ‘三不’은 不直接通航·不直接通郵·不直接通商을 가리킨다.

雙方交流的 實際의 經驗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台灣이 1987년 7월 一般國民의 大陸訪問(探親)의 開放을 선언한 이래 形成된 ‘大陸熱’은 確實히 雙方間의 緊張關係를 緩和시킨 肯定的 意義가 있지만, 이것이 中國의 政治的 統一을 위해 前進하는 데에 障礙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本稿에서는 中國人의 論理와 思考에 초점을 맞추어 西歐의 統合理論의 觀點에서 中國統一問題의 可能性을 打珍해 보는 同時에 ‘一國兩制’와 ‘一國兩區’ 主張 形成의 背景과 그 概念을 分析해 봄으로써, 其他의 모델로 海峽兩岸의 統一問題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現 執權層에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나타내려고 한다.

II. 西歐 統合과 中國統一 모델의 相異한 理論構造

分斷國家(또는 地域)의 統合과 對峙에 대한 研究는 대체적으로 漸進的 統合, 現狀維持 및 各自獨立 等 세 가지 觀點에서 그 理論의 根據을 찾을 수 있다.⁹⁾ ‘中國統一’의 理論構造와 模型은 비록 台灣內部에서 共通認識에 到達하고 있지 않으나, 基本的으로 이상 3種의 方向을 벗어나지 않는다. 現實的 環境에서 살펴보면, 西歐의 ‘統合理論’(Integration Theory)은 先 經濟方面·後政治方面의 基礎위에 成立되는데, 그 成功的인 經驗이 이미 ‘亞太共同體’(Asia-Pacific Communities)의 形態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서 아시아 태평양 地域의 ‘中國人社區共同體’(Chinese Communities)¹⁰⁾를 包含하는 史上初有의 統合實驗이 시도되고 있다. 한가지 다른 점은, 西歐의 統合은 이미 어떠한 武力介入의 要素도 排除되었으며 同時에 상당히 接近된 이데올로기와 政治體制의 民主化라는 先決條件下에서 進行된다는 것이다. 中國問題는 본래 이러한 條件을 具備하고 있지 못하므로 어떤 한 사항을 中國 統一問題의 構想에 關聯시키는 것은 執權者의 ‘正統

9) 張富美 編, 『台灣問題時論集』(台北: 前鋒出版社, 1988), pp.37-38.

10) 現在 아시아 태평양 地域의 ‘中國人社區’는 中國大陸, 台灣 및 홍콩, 마카오 地域과 海外的 華僑社會를 포함한다.

思想'의 影響을 받기 때문에 그 實現이 더욱 어려워진다.

1. 西歐式 '統合理論'

國際政治學에서 '統合理論'을主張하는 어떠한學派의學說도 現段階 中國의 分斷狀況에 完全하게 適用하기는 어려우나, 어느學說이나 分斷國家의 問題를 解決하는 데 있어 思想的 측면의 參考事項을 提供한다. 第2次 世界大戰後, 특히 1950年代 東亞陣營의 衝突이 激烈할 때 西歐國家에서는 類例없는 團結狀況을 나타내었다. '歐洲石炭鐵鋼共同體'(ECSC), '歐洲經濟共同體'(EEC)와 '歐洲原子力共同體'(EAC)가 成立되어 40여년간 지속적으 發展함으로써 西歐學界의 '統合理論'이 充分한 實證의 經驗을 얻었으며, 특히 兩獨間의 特殊한 協力關係는 오랜동안의 꿈이었던 國家統一의 大業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西歐統合의 過程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도입하여 國際의 地域 次元의 統合을 통해 海峽兩岸의 敵對感을 낮추고 나아가 새로운 分斷國家의 統一模型을 構築할 수 있을 것인가?

分斷國家(또는 地域) 問題의 解決이라는 점에서 보면, 아시아 태평양 共同體의 構想은 확실히 그 理論模型이 있다. 도이취(Karl W. Deutsch)에 따르면 '統合'은 "이전에 分離되었던 單位가 하나의 相互依存의인 組合體로 되는 것"¹¹⁾이라고 定義되는데, 이는 "어떤 地域內에서는 長期間에 걸친 強力하고 廣範圍한 推進을 통해 그 地域內 國民으로 하여금 平和의 變化過程 속에서 利害와 共通된 意識을 達成하는 것"을 뜻한다.¹²⁾ 또한 하스(Ernst B. Haas)는 統合을 "政治共同體를 創造하는 일종의 過程으로써 이 政治共同體는 그 組織과 價値에 特色을 지닌다"¹³⁾라고 認識하는데, 그

11)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Englewood Cliff, N.Y. : Prentice Hall, 1971), P.158.

12) Karl W. Deutsch,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op. cit., P.5.

13) Ernst B. Haas, "The Study of Regional Intergration : Reflections on the Joy and Anguist for Pretheorizing", in *Regional Integration : Theory and Research*(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6.

涵意도 어떠한 問題에 見解가 달라 갈등하는 團體에 대하여 平和的 解決方法을 찾으려는 試圖이다.¹⁴⁾ 이외에 푸차라(Donald J. Puchala)는 도이취의 논리를 더욱 확대하여, 統合을 “領土, 政府, 政治制度, 經濟, 社會, 文化等 多方面의 融合”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¹⁵⁾ 이상의 세 學者의 統合理論에 依據하여 中國統一問題 解決을 위한 方案으로 다음의 몇몇構想이 提案되었다. 즉 ‘三個中國論’,¹⁶⁾ ‘中國人社區共同體’,¹⁷⁾ ‘中國國協’,¹⁸⁾ ‘中國聯邦’,^{19), 20)} 또는 ‘多體制國家’²¹⁾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海峽兩岸의

14) Ernst B. Haas, “International Integration: The European and the Universal Proces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15(1961), PP.336-392.

15) Donald J. Puchala,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Regional Integr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24: 4(1970), P.740.

16) ‘三個中國論’ 模型은 第2次 아시아 태평양 經濟協力長官會議 理事會에서提起되었다. 이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地域의 政府次元의 經濟協力機構로서 호주의 호크 총리가 1989년 5월에 發起하였는데, 그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地域의 經濟協력을 多邊化함으로써 國際社會에서 증대하고 있는 地域性 經濟協力機構에 대항키 위한 것이다. 본래의 계획은 美·日·캐나다·뉴질랜드·東아시아協力機構·韓國·香港·台灣·中共 등 15개의 국가와 地域機構를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6·4 天安門事件’으로 인하여 台灣, 香港 및 中共의 入會名稱問題로 12개국만이 참석한 가운데 同年 11월 캔버라에서 第1次 會議을 열었다. 1990년 7월말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도 ‘三個中國’에 대한 同時 入會問題가 妥決되지 않았음으로써, 大會는 中國人間 問題 解決後 大會의 討論에 부치도록 決議하였다.

17) 黃枝連, 「中國人地區」協作系統的探索, 『信報財經月刊』(香港), 第124期(1989. 2), pp.32-38.

18) 이는 在美 華僑學者인 張旭成이 ‘大英國協’의 모델에 의거하여 제기하였다. 註9)를 참조.

19) 이 모델은 立法委員인 費布平이 提案한 것임. 註9) 張富美의 책 p.37을 참고할 것. 이외에도 西獨學者 킨더만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Gottfried-Karl Kindermann, “Neither Communism Nor Separatism-Problem Structures of the New Reform Policies on Taiwan with Special Regard to Taiwan-Mainland Relations: A European Perspective,” in King-yuh Chang (Ed.),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aiwan and Mainland China* (Taipei: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1989), pp.1-28.

20) 이 모델은 立法委員인 朱高正이 提案한 것으로, 海峽兩岸이 衝突과 統合을 경과한 후의 中國統一模型이다. 『朱高正論文集—和平革命第三集』(台北: 九博出版公司, 1988), pp.125-140을 참조.

21) 이 모델은 魏鑄教授에 의해 提案되었다. 魏鑄, 「多體制國家」의 統一問題, 『聯合報』, 1980年 10月 15日 第2版 참조.

Hungdah Chiu & Robert Downen(eds.), *Multisystem Nations and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ermany, Korea and China*, Occasional Papers/Reprints Series in Contemporary Asian Studies, No. 8(1981)(45),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aryland.

統一을 위한 模擬의 이고 過渡性을 띤 構想들은 각기 그 理論의 根據를 가지고 있었으나 現實 環境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그 存立의 機會를 喪失하였다. 그 原因을 자세히 살펴보면 雙方 執權者의 統一問題에 대한 認識의 差異가 너무 크다는 데 있었다. 中共은 中國統一問題의 解決에 ‘霸主’의 立場을 나타내어 다른 思想과 建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台灣은 雙方關係의 緊張緩和에 앞서 事前에 準備하려는 精神이 결여되어 있어 中國統一 理論 部門의 研究가 적었다. 따라서 최근 2~3년간 海峽兩岸 交流가 돌이킬 수 없는 狀況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고나서야 執權黨이 그 步調를 맞추는 식의 感覺的 處理의 傾向을 지니고 있으며, 中共政權의 反應에 따라 끊임없이 政策을 調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中國統一 모델은 거의 中共의 ‘一國兩制’의 범위에서 맴돌고 있고 다른 모델의 實行可能性에는 注意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다. 現段階 海峽兩岸의 相互關係의 發展中에서 台灣은 몇 년간 실로 어렵게 相互交流의 經驗을 쌓았으나, 여기에 連鎖的으로 생긴 問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困境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公式的인 政府次元의 接觸을 배제함으로써 생기는 誤解 또는 誤導에 의한 事件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약간의 機能的 問題도 表出되고 있다. 政治學者 웨이너(Myron Weiner)에 따르면, 서로 다른 사회체제간의 통합을 위한 方案으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文化次元에서의 國家一體感의 形成”, “모든 政治勢力을 結合하여 이를 管轄하는 하나의 政府를 만듦”, “많은 個體들을 特定한 活動目的을 지닌 組織內로 흡수하는 것” 등이다. 海峽兩岸이 어떠한 統一의 模型을 선택하더라도 事前에 반드시 相當한 期間동안의 交流過程을 거쳐야만 雙方이 政治協商의 第一步를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西歐의 統合過程을 研究하는 學者들은 어떠한 視角에서 觀察하든 經濟聯合優先의 重要性和 實現可能性을 輕視하지 않는다. 西歐의 經濟的 統合過程을 40여년동안 經驗하고 난 후에야 1993년의 政治的 統一의 進行을 準備할 수 있었다는 점과 獨逸統一前 시도된 多年間의 ‘獨逸政策’이 이를 證

明하고 있다. 이외에 漸進적이고 緩慢한 交流過程에 있어 平和的인 協商方式은 단순히 統合理論上의 必要手段이 아니라 同時に 成功에 必須的인 基本事項이 된다. 西歐의 統合經驗에서도 나타나듯이 海峽兩岸의 政權이 先入觀을 버리기만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經濟協力機構 內部에서 ‘中國人社區共同體’의 基本骨格을 發展시키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理念을 갖고 있는 中國人으로 하여금 國際經濟協力 機構內에서의 經濟·貿易關係를 多邊化시켜 相互間 交流의 經驗을 축적하여 時期가 成熟했을 때 다른 次元에서의 協力으로 점차 擴大시킬 수 있다. 台灣과 大陸의 中國人들이 相互信賴의 基礎를 확립한 후, 政治的 統一에 대한 協商을 推進한다면 自然히 順利的으로 本軌道에 오르게 될 것이다.

2. 中國의 傳統的 ‘分合論’

우리는 中國歷史의 發展過程에서 ‘大一統’과 ‘正統’의 思想을 秦代以來 계속하여 統治者가 당연히 지녀야 할 責任으로 認識해 왔음을 發見할 수 있다. 國家가 分斷狀況에 처할 때마다 歷代의 中國王朝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대부분의 國力を 統一의 大業에 소모하였던 것이다. 中國二十四史의 變化를 거쳐 형성된 政治文化는 “天下는 分裂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天命을 받아 新王朝가 탄생한다.”(天下分久必合, 周雖舊邦其命惟新 : A politically divided china will surely be reunited before long to resume its cultural continuity with renewed vitality)²²⁾ 바뀔 말하면, 中國歷史上 항상 나타났던 ‘統’과 ‘治’ 혹은 ‘分’과 ‘亂’의 循環現象은 最後에는 往往 武力을 통해 終結되는데, 明代 羅貫中이 『水滸傳』의 머리말에서 “天下의 大事를 말하자면, 分裂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고 合이 오래되면 반드시 分裂한다”고 人口에 膾炙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中國의 分裂과 統一現象을 正確히 설명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論理로 推論

22) John C.H. Fei, "Political-Economic Foundation", *Asian Affairs*, Vol. 16, No. 3, Fall 1989, P.119.

해 보면 中國歷史上 國家의 ‘統’ 또는 ‘合’은 常態이며 ‘分’과 ‘亂’은 變態가 되는 것이다.²³⁾ 1911년 滿清이 멸망하고 民國이 建立된 후 中國 內部에서는 다른 政府의 管轄을 받는 地域이 나타났었으며, 이들은 거의 協商手段을 通해 統一을 이루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1920년대 軍閥轄據時代에는 中央政府의 法令이 全國에 通用될 方法이 없었으며, 中央도 1937년 11월 7일 江西省 瑞金에 ‘소비에트 中央政府’를 세웠고 그 후 ‘陝甘寧邊區政府’(1934년 3월) ‘山西·察哈爾·河北·綏遠邊區政府’ 등을 設立했으며, 심지어는 抗日戰爭期間中인 1932년 3월 日本이 中國의 東北地方에 滿洲國을 建立하였고 1940년 3월에는 汪精衛政權을 육성하는 등, 中國에서는 일찌기 ‘一國兩府’, ‘一國多府’, ‘一國兩區’ 등이 이미 존재했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權은 오랫동안 存在하지 못했으며, 結局 武力에 의한 合併을 피할 수 없었다. 現在 中央政權도 統一이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中國의 옛 교훈에도 ‘霸道’가 아닌 ‘王道’로 國民을 統治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海岸兩岸間의 統一問題에 대한 視角은 여전히 ‘누가 과연 正統인가’의 心理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Ⅲ. ‘一國兩制’와 ‘一國兩區’의 形成背景 및 概念의 分析

海峽兩岸 中國人의 統一模型에 대한 見解는 黨派의 屬性, 居住環境 및 雙方關係의 親熱度 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²⁴⁾ 台灣의 執政黨은 ‘三民主義統一中國’에서 ‘一國兩區’의 주장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으로 “中國은 終局的으로 統一될 것이다”라는 認識을 갖고 있으나, 民進黨(DDP)은 住民自決權의 主張에서부터 黨內 ‘新潮流’派가 공공연히 黨綱領에 獨立思想을 반영시키려는 등 黨內 일부 인사가 주장하는 ‘中國의 情感’을 말살하려 하고 있으며, 新興政黨인 中華民主社會黨은 홍콩의 知識人들과 생각

23) 張王法, 「中國歷史上的分與合」, 朱松柏主編, 「分裂國家相互動關係」(台北: 政治大學國際關係研究中心, 1989), pp.1-6.

24) 張副美, 前揭書.

을 같이 하는 ‘大中國聯邦制’의 性向을 띠고 있으며, 海外的 華僑社會에서 居住環境과 政黨에 대한 認識上의 차이로 인하여 ‘獨逸方案’, ‘싱가폴式模型’, ‘國協式模型’에서 台灣獨立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 또한 海外的 大陸留學生들도 ‘一國兩制三政府’ 模型을 提昌하고 있으나,²⁵⁾ 유독 中共政權만은 ‘힘의 상관관계’(Correlation of Force)를 盲信하여 기타 中國人 社會에서 주장하는 統一에 관한 어떠한 模型도 받아들이지 않고 ‘一國兩制’의 構想만을 堅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獨逸式方案’, ‘中國聯邦’ 또는 ‘一國兩區’ 등의 개념은 모두 그 實驗의 機會나 成功可能性을 檢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1. 中共의 ‘一國兩制’의 概念

1979년 1월 1일 中共은 美國과 正式로 修交한 後, 台灣, 香港 및 마카오의 미래의 地位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탐색을 거쳐 ‘一國兩制’의 構想을 中國統一政策의 최고 指導原則로 定하였다. 이에 관한 언급은 1982년 鄧小平이 英國의 대 처 首相을 만났을 때 ‘一個國家 兩鍾制度’의 構想을 正式로 提示하기 이전에는 葉劍英의 平和統一 ‘九條方案’의 提案이나 中共 人民代表大會 常委會의 ‘告台灣同胞書’ 등에서 단지 ‘三通四流’를 언급하거나 장래 台灣의 位相을 ‘特別行政區’로 한다는 정도였다. 여기에서 ‘一國兩制’라는 用語를 사용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볼 때 中共의 ‘一國兩制’의 構想은 鄧小平의 突發的인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그 후 1983년 6월 鄧小平이 在美 華僑學者인 楊九宇를 接見하는 자리에서 ‘一國兩制’의 內容에 대해 進一步한 解釋을 내렸는 바,²⁶⁾ 中共이 이 期間동안 苦心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一國兩制’의 構想을 闡明한 후 초기에 中共이 主張한 要點은 海峽兩岸이 相互 相對方 政府의 顛覆을 포기할 것, 台灣은 自己의 司法制度 및 黨·政·軍體系를 보유할 수 있고, 中共은 台灣에 人員을

25) 辛衍仁, 「一國兩制三政府」, 『中國論壇』 第30卷 第7期(1990. 7. 10), pp. 61-65.

26) 『人民日報』, 1983年 7月 30日 第1版: 楊九宇, 「鄧小平對和統一的最新構想」, 『九十年代』, 1983年 8月.

파견하지 않으며, 台灣은 北京 '中央政府'의 參政權을 가진다는 것 등이었다.²⁷⁾

1984년 6월 鄧小平은 香港政府 行政局 議員인 鍾士元과 會談하는 자리에서 '一國兩制'에 대해 가장 간단명료한 定義를 내렸는데, 그것은 中華人民共和國內의 대륙 10억 인구는 社會主義制度를 施行하며, 香港과 台灣은 資本主義制度를 施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²⁸⁾ 이후 이러한 基本原則下에서 中共은 學界의 力量을 動員하여 '一國兩制'의 理論化를 試圖하면서, 계속하여 各種 刊行物에 그 研究結果를 發表하였다. 中國社會科學院 政治研究所 所長이었던 嚴家其는 이 構想이 내린 抽象的 定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定義에서는 한 國家가 憲法에 근거하여 자기의 領域內에서 相異한 政治·經濟·社會制度를 實行할 權利가 있음을 強調하고 있지만 이러한 地域은 地方政府로 看做되어 國家主權을 행사할 可能性이 전혀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²⁹⁾ 다른 몇몇 論文도 嚴家其의 論點과 大同小異한데, 모두 하나의 主權 아래 여러 종류의 統治權의 존재를 허용하고 있으나 主權은 中央政府에 歸屬되어야 하며 自治權을 享有하는 地域도 中央政府로부터 權限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⁰⁾ 바꿔 말하자면 中共政權이 생각하는 中央은 北京을 지칭하는 것이며 한 國家內에서의 두 制度는 對等한 關係가 아닌 것이다.³¹⁾

中共의 '一國兩制'의 構想은 辨證法的 唯物論과 史的 唯物論의 分析方式을 통해 中國의 分斷狀況을 社會主義와 資本主義가 共存하고 있는 事實과 연결시켜 본 것으로, 비록 나름대로 論理的 思考體系를 가지고 있으나 그

27) 註 23)과 同一.

28)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香港:三聯書店, 1985), p.27.

29) 嚴家其, 「『一國兩制』和中國統一的途徑」, 『政治學研究委刊』(북경), 1985년 第2期, pp.1-7.

30) 王邦佐, 王滬寧, 「從『一國兩制』看主權與治權關係」, 『政治學研究委刊』, 1985년 第2期, pp.12-15; 姚一平, 「試論『一國兩制』的理論和國際意義」, 『現代國際關係』, 總 第18期(1988年 第2期), pp.13-17.

31) 앞의 註와 同一: 廖思, 「『一國兩制』的理論質疑」, 『爭鳴』, 第85期(1984.11), 38-44.

實際적인重點은 여전히 中國傳承의 ‘大一統’觀念과 ‘正統’思想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分斷國家의 執權者도 그 相對方에게 地方政府로 간주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台灣은 主權國家의 絶對條件을 具備하고 있고 國際社會에서도 이 때문에 台灣이 하나의 政治的으로 獨立된 實體라는 사실을 없애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中共도 이 점에 대해서 注意하고 있는 바, 본래 台灣, 香港 및 馬카오, 그리고 海外的 中國人에게 焦點을 맞추어 宣傳해오던 中國統一의 最高戰略施策(‘一國兩制’)을 英·美·日 등 국가에 대한 遊說工作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國家理論을 創造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이는 西方國家로 하여금 이러한 統一戰略을 믿게 하는 동시에 國際的 爭點을 平和的으로 解決하는 데 효과를 거두기 위한 試圖이다. 사실 中共이 이렇게 국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그 영향력을 擴大하려는 戰略은 政治的으로 다음 네 가지의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첫째, 國際社會에서 계속 台灣을 孤立시킴으로써 台灣의 國際的地位를 약화시키고, 둘째, 台灣이 對外 武器를 구입하여 防禦能力을 維持하는 것을 沮止하며, 셋째, 外勢에 의한 內政干涉을 許容하지 않음을 구실로 武力에 의한 中國統一의 可能性을 포기하지 않으며, 넷째로는 台灣을 ‘特別行政區’의 地方政府 形態로 規定하려는 것 등이다.

2. 台灣의 ‘一國兩區’의 概念

中共이 ‘一國兩制’ 政策을提起한 후 몇 년간 台灣은 오늘과 같은 복잡한 關係에 봉착한 적이 없었다. 台灣은 中共의 이러한 主張을 의례적인 統一戰略 口號의 일종으로 보아 그 對應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大陸親和訪問을 허용한 이래 台灣은 날로 擴大되고 있는 雙方의 交流活動을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探索의 段階에 놓여 있으며, 現在 雙方의 政治的地位를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摸索하는 중이다. 그 후 1989년 3월 28일 俞國華 前行政院長이 立法院에서 행한 施政報告에서 처음으로 ‘一個中國, 兩個對等政府’(one country, two gov-

ernments)의 構想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近年의 中共의 ‘一國兩制’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反應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8월 31일 現任 郝伯村 行政院長은 立法院 院설에서 雙方의 地位를 正式으로 ‘一國兩區’(one country, two regions)라고 規定하였다.³²⁾ 사실 ‘一國兩府’의 概念은 ‘一國兩區’의 概念보다 명확하지 못하며, 동시에 雙方間에 政治的 衝突을 쉽게 야기시킬 수 있는데, 그 중 國家主權의 分離問題는 가장 민감한 문제로서 實際로 實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台灣이 주장하는 對等한 談判을 위한 但書는 中共이 武力으로 台灣을 침범하려는 의도와 四項堅持를 먼저 포기할 것과 國際社會에서 台灣을 배척하지 않을 것 등으로, 이 前提條件下에서 雙方은 交流의 ‘執行段階’로 진입 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⁴⁾ ‘一國兩區’의 實質的 內容의 測面에서 살펴보면 台灣의 執政黨은 ‘두개의 中國’ 또는 ‘하나의 中國과 하나의 台灣’의 概念에 대한 中共의 격렬한 반응을 회색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一國兩區’의 概念은 단지 地域的인 管轄權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雙方이 서로 다른 法源을 가진 民事에 있어서의 ‘法律衝突’(conflict of laws)의 처리에 유리하며,³⁵⁾ 한동안 雙方이 現在의 ‘各自主張’하는 模型을 유지하면서 雙方交流가 進一步하여 확대 전개된 후 雙方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方案을 만드는 데 유리한 것이다.

‘一國兩區’의 政治的 意義를 살펴보자면, 이 構想은 일련의 理論的 研究를 거친 實質的인 策略으로써 雙方間의 ‘對等政府’와 ‘地方政府’ 主張으로 생기는 論爭을 없애고, 이를 ‘台灣地區’ 및 ‘大陸地區’의 概念으로 代置하여 雙方이 機能的 交流에만 주력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概念의 몇가지 重點은 다음과 같다.

32) 이 생각은 이미 1年前에 제기되었으나 關心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적지 않은 政府의 高位人士(예를 들면 施啓揚 行政院 副院長, 馬英九 研考會 主任委員, 蕭天贊 國策顧問, 魏鏞 國民黨 革命實踐 研究院 主任 등)도 포함된다. 『聯合報』, 1990年 9月 1日, 第2版을 볼 것.

34) 『自立晚報』, 1990年 5月 17日, 第13版.

35) The China News, September 1, 1970, pp.1 & 6.

1) 소위 '台灣地區' 및 '大陸地區'의 分類은 완전히 事實과 地理的 測面에 속하는 것으로, 그 정치 이데올로기상의 意義를 減少시키고 現實可能的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雙方 國民間의 法律的 關係를 명확히 한다.

2) '法律衝突'의 概念은 英美의 國際私法에 源泉을 두는 것으로, 이러한 方法으로 雙方間의 民事問題를 해결하는 것이 아마도 現在狀況으로는 비교적 適當한 方法일 것이다.

3) '法律衝突'의 이론은 國家와 國家間의 행위에 局限되지 않고 한 國家 內部에서도 그 前例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데, 美國의 各州도 이 理論을 받아들여 各州間에 住民들의 왕래로 인해 발생하는 法律問題를 해결하고 있다.

4) 台灣이 일방적으로 海峽兩岸關係의 條例를 制定한 것은 法律衝突理論을 채택, 시행함으로써 雙方國民의 民事訴訟關係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中共政權과의 직접 協商이나 對話가 필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中共이 이에 首肯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칙적으로 中華民國 政府의 國家主權을 行使하는 象徵이 된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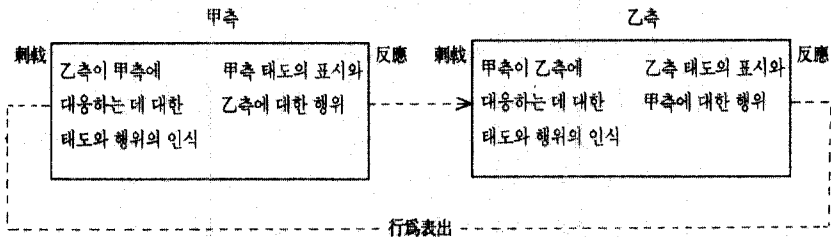
의심할 여지 없이 '一國兩區'의 概念下에 法律衝突理論으로 雙方間 民事關係를 規定한 것은 앞서의 몇몇 模型과 비교하여 볼 때 現在 雙方의 政治現實을 더욱 잘 反映한 것이다. 中華民國行政院에서 現在 '台灣地區와 大陸地區의 人民關係 條例' 草案에 따르면 '台灣地區'는 台灣·澎湖·金門·馬祖地域을 포함하는 것으로 規定하며, '大陸地區'는 "台灣地區 以外의 中華民國 領土"를 가리킨다. 따라서 台灣과 大陸의 民事法律이 다름으로 해서 발생하는 雙方이 관련된 民事案件은 이 草案의 第22條에 의해 우선적으로 해결된다.

IV. 海峽兩岸의 相互關係 發展과 그 困境

近年의 海峽兩岸의 빈번한 民間交流가 本質的으로 雙方政治關係에 있어

36) 『中國時報』, 1990年 9月 27日, 第2版을 볼 것.

대폭적인 改善을 이루지는 못했다. 基本的으로 雙方의 關係는 良性 또는 惡性的 相互關係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음 圖解에서 그 初步的 模型을 얻을 수 있다.³⁷⁾



다시 말하면, 中共政權이 甲側 또는 乙側 어느 쪽에 위치하든, 台灣이 甲 또는 乙 어느 쪽이 되려 하든, 雙方은 相對方의 態度와 行爲에 대한 認識上의 차이로 인해 지나친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相對方을 자극하는 행위도 하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狀態가 계속된다면 雙方關係는 惡性的 現象이 循環되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台灣이 1998년 아시안 게임의 主催申請을 하자 中共 올림픽위원회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台灣을 支持하지 못하게 한 例를 보고, 現在 '大陸熱風'에 빠져 있는 台灣國民들이 과연 "열정적인 北京行이 바른 것인가" 하는 矛盾과 反省을 불러 일으켰다.³⁸⁾ 특히 최근 몇 년간 中共은 여러 방면으로 台灣의 國際社會에서의 外交의 生存空間의 開拓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武力으로 합병한 方式을 假說的으로 引用하여³⁹⁾ 台灣朝野에 심한 反感을 불러 일으켰다.

中共의 表裏不同한 對台灣政策은 台灣으로 하여금 대폭적인 開放을 통한 雙方交流範圍의 擴大를 꺼리게 하는 主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台灣이

37) 이 模型은 다음에서 채택한 것임.

Ole R. Holsti & Richard A. Borden & Robert C. North, "Measuring Affect and Action in International Reaction Models: Empirical Materials from the 1962 Cuban Crisis",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Free Press, 1969) p.684.

38) 『中國時報』, 1990年 10月 1日, 第6版.

39) 『九十年代』, 1990年 9月, pp.34-35 및 『爭鳴』, 1990年 9月, pp.72-75.

大陸의 親知訪問을 許容한 이래 지금까지 그 人員은 160萬에 達하였으며⁴⁰⁾, 여기에서 派生된 問題(재산상속권·不法入國·武器密輸·犯人引渡·大陸에 간 台灣商人의 惡德行爲⁴¹⁾等)는 台灣社會의 治安을 위협 水位에 도달케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大陸住民에게 台灣에 대한 印象을 惡化시킴으로써 將來 中共이 武力으로 台灣을 침범하는 데 대한 구실을 증가시켰다. 雙方政權이 相互信賴의 基礎를 세우기 어려운 主要原因은 대개 權力層間에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 때문이다. 특히 이는 國民黨이 과거 中共과의 合作에서 체험한 뼈아픈 敎訓⁴²⁾과 1989년의 '6·4 天安門事件'의 風波에 기인한다. 將來의 雙方關係는 理性的 協商方式에만 의존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점차적으로 共通의 認識을 가질 수 있다. 최근 雙方은 台灣에 不法密入國한 大陸人들을 歸還시킬 때 발생한 船舶問題를 民間團體인 赤十字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大陸으로부터의 密入國者에 대한 처리방법을 협의해내었다. 또한 심지어는 執政黨으로 하여금 漁業界에 大陸 勞動者를 雇用할 수 있는가 하는 可能性에 대해 研究하도록 하게 하였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을 雙方의 良性的 相互關係의 시작으로 가정한다면 雙方은 모두 失敗하는 쪽으로 일이 進行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⁴³⁾ 그렇다면 理性的 思考로 海峽兩岸 關係를 良性的 相互關係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要因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 3년간의 事實에 비추어 보면, 雙方交流의 成果는 本來의 豫想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그 중 아직도 一時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問題가 남아있다. 이는 中共이 國際社會에서 台灣의 對外關係의 發展을 持續的으로 저해한 점⁴⁴⁾에 비교적 큰 責任이 있으며, 台灣은 國家安全과 國民福利의 測面

40) 『中國時報』, 1990年 9月 14日, 第2版.

41) 『九十年代』, 1990年 9月, pp.46-47; 『財勢月刊』, 1990年 6月, pp.72-75.

42) 丘宏達, 『中國統一問題的專攬—中華民國政府入場的分析』, 邵玉銘 主編, 『海外知識分子國是討論集』(台北: 自行出版, 1983), pp.801-802; 田弘茂, 『中華民國的政治和社會變遷』, 李晴輝·丁連財 譯(台北: 時報出版公司, 1989), p.300.

43) 『中國時報』, 1989年 12月 31日 참조.

44) The China News, September 1, 1990, P.6.

에서 약간 극단적인 保守的 傾向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미래의 中國統一이 平和的 方向으로 이룩될 것이라고 假定하면, 雙方은 반드시 長期間의 交流過程을 거쳐야 한다. 이는 雙方이 分斷된지 이미 40餘年이 경과하면서 양쪽의 國民들이 서로 다른 政治社會制度의 環境에서 성장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서로 다른 人生觀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台灣이 中國 未來의 統一의 길을 앞에 놓고 직면한 세 가지 問題는 다음과 같다.

1) 台灣에서 出生하여 成長한 世代의 대부분이 일정한 정도의 台灣意識을 갖고 있으며, 統一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台灣의 福祉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⁴⁵⁾ 비록 新世代가 教育過程에서 ‘大一統’ 觀念의 洗禮를 받아 台灣獨立의 思想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⁴⁶⁾ 海峽兩岸의 相互關係에서 장기적으로 規範을 세우지 못하고, 台灣住民이 內政과 外交部門에서 中共의 압력을 갈수록 많이 느낀다면 앞으로 台灣獨立運動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武力으로 國家가 統一되는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는 現代 中國人에게 最大의 悲劇이 될 것이다.

2) 台灣의 朝野間에 中國統一問題의 意見이 兩極化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在野인 民進黨 內部에서는 ‘6·4天安門事件’ 後에 海峽兩岸間의 교착상태와 政治적 地位問題에 대해 서로 見解를 달리하는 系派가 탄생하였다. 이 중 하나인 ‘美麗島’ 系派는 統一問題에 대해 過渡時期의 方法으로, 仲介團體·仲介地區·南海經濟共同體·亞洲共同市場·中華國協·中華邦聯을 거쳐 中華聯邦에 이르는 소위 ‘7단계론’의 統一方案을 제기하였다.⁴⁷⁾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中國의 ‘大一統’ 思想에 附合하는 것이다. 또한 ‘新潮流’ 系派가 주장하는 台灣獨立의 기세는 台灣 政治不安의 요소로 잠재하고 있다. 이들은 中華民國과 美國이 斷交後 制定한 ‘台灣關係法’(Taiwan Relation Act)에 착안하여 ‘中國關係法’의 구조를 연구해

45) 『天下雜誌』, 1990年 9月, P. 116.

46) 『新新聞周刊』, 第185期(1990. 9. 24), p. 19.

47) 『自立早報』, 1990年 9月 22日, 第19版.

났다. 여기에서 그들은 海峽兩岸의 雙方은 ‘事實認定’(de facto)의 過渡期를 거쳐 ‘法律認定’(de jure)을 달성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의 독립된 主權을 행사하는 新國家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⁸⁾

3) 中共은 ‘一國兩制’의 체계에 부합되는 일관된 統一模型을 제외하고는 台灣에서 제안하는 中國統一問題의 해결을 위한 어떠한 건설적 構想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언제나 台灣이 ‘두개의 中國’ 또는 ‘하나의 中國, 하나의 台灣’ 政策을 시행하려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즉 台灣이 다른 統一方案에 대한 實驗의 기회마저 없는 상황 아래에서 雙方政權이 政府次元의 접촉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성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中共의 台灣獨立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V. 맺음말

‘6·4天安門事件’後 中共은 知識人들에게 이미 그 政權의 合法性(legitimacy)을 점점 잃어 가고 있으나, 西方國家의 制裁措置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海峽兩岸의 相互關係의 發展에 대해서는 약간의 躁急함까지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바로 台灣쪽에서 가장 憂慮하고 있는 일이다. 여하튼 雙方은 단지 160海里에 불과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어서 8분이면 전투기의 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中共 內部的 어떠한 非理性的 政策決定도 능히 雙方關係를 再緊張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中共의 일거수 일투족은 台灣의 각별한 관심을 끈다. 台北의 政策決定者들은 中共政權에 대해 조금의 信賴感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現在의 對大陸政策을 취함에 있어 “通信은 하되 通郵는 하지 않으며, 商品은 交流하되 通商은 하지 않으며, 運送은 하되 通航은 하지 않고, 만나는 하되 接觸하지 않으며, 制限은 緩和하되 妥協하지 않고, 漸進을 추구하지만 統一하지는 않는다”(通信而不通郵·通貨而不通商·通運而不通航·會晤

48) 앞의 註와 同一.

而不接觸·放髮而不妥協·漸進而不統一)라는 奇現象을 나타내고 있다.⁴⁹⁾

이와 비교해서 中共의 對台灣政策은 확실히 일관성을 띠고 있는데, ‘一國兩制’의 基本構造下에 ‘三通四流’의 政策으로서 台灣政府로 하여금 政府次元의 不對等協商에 第一步를 내딛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武力도 不辭한다는 위협 아래 平和的인 方法으로 統一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中共의 이러한 일련의 統一問題에 대한 思考는 中國의 歷史的 傳統中の 두 假設의 기초 위에 성립되고 있다. 그 하나는 領土, 人口, 軍事力, 國民總生産額 또는 國際的 地位를 불문하고 ‘힘의 比較’ 原則에 의해 강한 쪽이 자연히 中原을 지배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統一은 歷史의 必然現象으로서 ‘分’과 ‘亂’의 局面이 끝나면 ‘統’과 ‘合’을 향해 邁進하는 것이 歷代 執權者의 도리라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論理的 推論에 따르자면, 실제로 中共政權의 어떠한 讓步의 흔적도 發見하기 어려울 것이며, 台灣이 확실한 安全保障이 되어 있지 않은 狀況에서 경솔하게 中共과 協商함으로써 스스로를 地方政府로 格下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中國統一問題의 解決 以前에 雙方이 現存의 相互關係를 바탕으로 점차 經驗을 축적하고 效果를 체험함으로써 西歐의 統合과 獨逸統一의 成功적 先例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平和의 手段으로 分斷國 內部的 統合을 推進해야 하며, 雙方은 政治的 理念의 敵對關係를 清算하고 對等한 地位로 經濟, 文化, 學術 등 次元의 交流의 規範을 共同制定한 후 그 經驗을 통해 方向을 修正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海峽兩岸關係의 位相이 平和的 競爭을 거쳐 平和의 狀態로 變化하게 되면, 마지막 段階인 平和統一中國의 大業은 자연히 成就될 수 있을 것이다.

49) 高希均, 「對中共不應有浪漫憧憬, 對中國則要有歷史責任」, 『經濟日報』, 1990年 7月 17日, 第2版.